

내년 국비 광주 3조3858억·전남 9조502억 확정

시, 공모사업 등 614억 추가 확보 AI 2단계·AI영재고 등은 미반영도, 1574억 증액...일부 SOC 누락 "내년 1분기내 최대한 조기 집행"

광주와 전남도의 내년 국비가 각각 3조3858억원과 9조502억원으로 확정됐다.

11일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 중 광주시 예산으로 3조3858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예산안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과 연말 확정되는 계속사업 등의 국비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최종 확정액으로, 전년도 3조2446억원 보다 1412억원(4.4%) 늘어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

당초 파악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됐다.

또 영산강 자전거마을 시험도시 구축 10억원, 인공지능(AI) 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반도체 제조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7억5000만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반면 광주시 핵심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등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인공지능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내년에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 자동차부품 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등 미래성장동력 사업은 정부와 협의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액 예산안에 따라 무산됐

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민생 예산과 지자체 주요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며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생대책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예산은 9조50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예산안에서 8조8928억원을 확보한 이후 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74억원(1.8%)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반영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총사업비 2조810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총사업비 2조1366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 5965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

계비 40억원(총사업비 1700억원) 등이 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1억원 확대(2024년 228억원→2025년 319억원)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비 44억원(총사업비 410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물류센터(FPC, FDC) 설계비 6억원(총사업비 300억원) △여수세계 섬 박람회개최 지원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 사업 59건 2073억원(총사업비 5조4592억원 규모)을 확보하는 등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반면 전남도가 증액을 요구한 △광주 송정-목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300억원 △보송-임성리 남해고속철도 건설 172억원 △압해-화해 국도 500억원 △하태-백야 국도 400억원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전남도내 예산 12조원에 대해 신속집행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 내년 1분기 내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생 경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내년 예비비를 활용해 민생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민생 추경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안정·경제회복 관련 사업을 발빠르게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며 "2026년 국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설득 논리를 개발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김 지사 "여순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조사기한 2년·보고서 6개월 연장 "진상규명·명예회복 끝까지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진상규명 조사 기한은 최대 2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또한 6개월 연장되며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76년의 길고 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온 생존 희생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랐던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5일로 만료됐다.

이에 전남도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한 분이라도 더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10일 결실을 보게 됐다.

김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큰 고통을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전남도는 지역사회 및 정치권과 더욱 힘을 모아 온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백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진도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와 주민들이 11일 진도 지산면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에서 기 참석,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항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다.

오지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